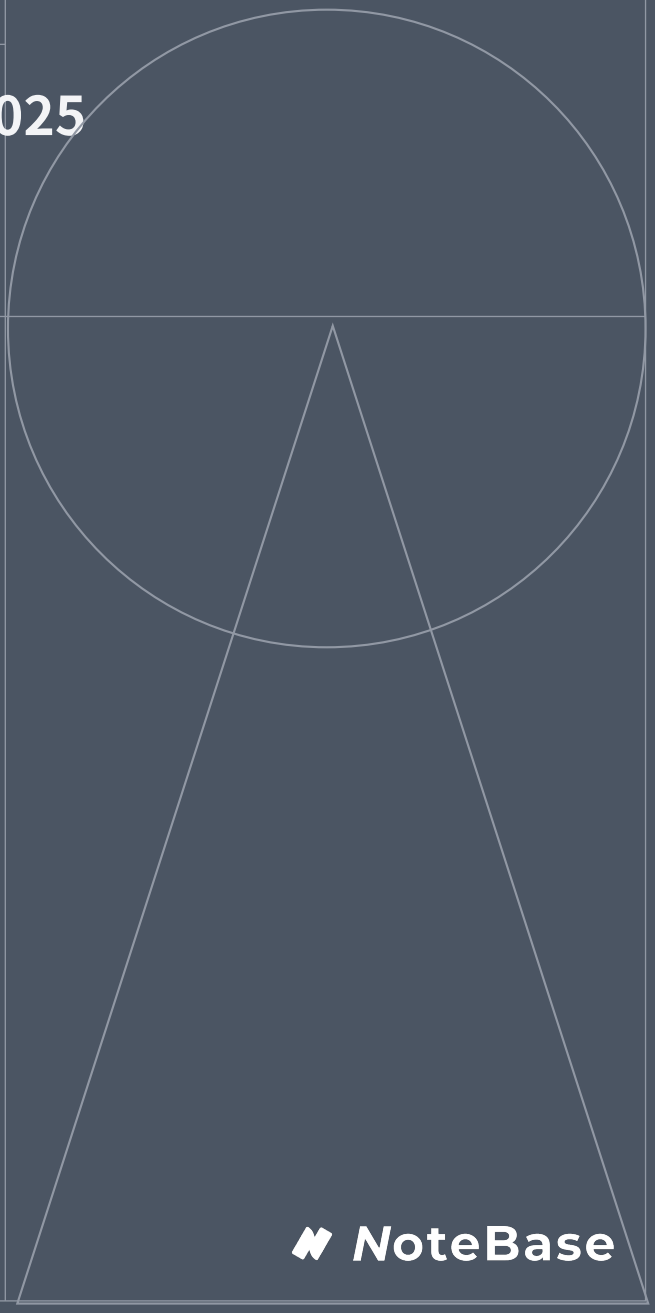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5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5

문 1.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어느 원칙에 해당되는가?

조세의 납부방법, 시기, 금 액 등이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① 확실성의 원칙
② 공평성의 원칙
③ 경제성의 원칙
④ 중립성의 원칙
⑤ 신축성의 원칙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조세의 납부방법·시기·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납세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실성의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실성의 원칙: 납세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키워드는 '명확한 법률과 규정', '납부방법·시기·금액', '이해와 예측 가능성'이다.
공평성은 조세부담의 공정한 배분, 경제성은 징세비용의 최소화, 중립성은 조세로 인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왜곡 최소화, 신축성은 경제상황과 재정수요 변화에 대한 세수의 탄력적 대응을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확실성의 원칙은 납부방법·시기·금액을 명확히 정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하여 자의적인 과세를 막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 제시문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공평성의 원칙'이다. 공평성의 원칙은 납세자 사이에 조세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제시문에 맞는 표현은 '확실성의 원칙'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경제성의 원칙'이다. 경제성의 원칙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드는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는 원칙이며, 제시문에 맞는 표현은 '확실성의 원칙'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중립성의 원칙'이다. 중립성의 원칙은 조세가 개인과 기업의 소비·생산·투자 선택 및 자원배분을 불필요하게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며, 제시문에 맞는 표현은 '확실성의 원칙'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신축성의 원칙'이다. 신축성의 원칙은 경제상황이나 재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조세수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제시문에 맞는 표현은 '확실성의 원칙'이다.

오답 포인트

'법률과 규정'이라는 말만 보고 공평성이나 중립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적 표현은 납부방법·시기·금액이 정해져 있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조세부담의 크기나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과세요건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서 무엇을 명확히 하려는지 확인한다. 금액·시기·방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면 확실성, 부담의 공정한 배분이면 공평성, 징세비용 절감이면 경제성, 선택과 자원배분의 왜곡 최소화이면 중립성, 경제변화에 대한 세수의 대응이면 신축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금액·시기·방법이 확실하면 '확실성', 부담이 고르면 '공평성', 거두는 비용이 적으면 '경제성', 선택을 덜 흔들면 '중립성', 변화에 잘 대응하면 '신축성'이다.

NoteBase

문 2. 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② 능력원칙은 빅셀(K. Wicksell)이 제시한 동등희생의 원칙이라는 재정이론에 그 근거가 있다.

③ 편익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④ 능력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로 통행료, 사용료 및 수수료가 해당된다.

⑤ 편익원칙은 밀(J. S. Mill)이 제공한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에서 이념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평과세의 두 기준인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을 구별하고, 각 원칙의 대표 사례와 이론적 근거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능력원칙은 공공서비스에서 얻는 편익과 관계없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시키는 원칙이다. 소득·재산·소비 등이 부담능력의 지표가 되며, 동등희생의 원칙과 연결된다.
편익원칙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에 비례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칙이다. 통행료·사용료·수수료가 대표적이며, 빅셀의 자발적 교환 이론과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아파트 가격 상승은 보유 재산가치의 증가이므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능력원칙에 따르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② X. 틀린 부분은 '빅셀(K. Wicksell)이 제시한 동등희생의 원칙'이다. 동등희생의 원칙은 밀(J. S. Mill)과 연결되며 능력원칙의 근거가 된다. 빅셀은 자발적 교환 이론을 통해 편익원칙을 설명하였다.
③ X. 틀린 부분은 '편익원칙'이다. 경제적 능력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능력원칙이다. 편익원칙에서는 각자가 공공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④ X. 틀린 부분은 '능력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이다. 통행료·사용료·수수료는 특정 공공서비스의 이용이나 편익에 대응하여 부담하므로 편익원칙의 예이다.
⑤ X. 틀린 부분은 '밀(J. S. Mill)이 제공한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이다. 자발적 교환 이론은 빅셀과 연결되며 편익원칙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밀은 능력원칙과 관련된 동등희생의 원칙에 연결된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⑤는 밀과 빅셀의 이론을 서로 바꾸어 놓았고, ③과 ④는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의 판단 기준과 사례를 서로 바꾸어 놓았다. 학자 이름과 원칙의 사례를 따로 외우면 이 교차 바꾸기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부담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소득·재산·소비 등 납세자의 경제력에 따른 부담이면 능력원칙이고, 공공서비스의 이용량이나 얻는 편익에 따른 부담이면 편익원칙이다. 학자는 '밀—동등희생—능력원칙', '빅셀—자발적 교환—편익원칙'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능력은 밀의 동등희생, 편익은 빅셀의 자발적 교환이다. 재산세는 능력, 통행료·사용료·수수료는 편익의 대표 사례이다.

NoteBase

문 3.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세는 특정분야 사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다.

② 지방세이면서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③ 국세이면서 목적세로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④ 직접세로는 법인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⑤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분배의 개선에 유리하다.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를 목적세·보통세,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로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세금의 사용 목적, 부과 주체,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의 일치 여부를 각각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목적세 = 세수를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정한 세금이다.
직접세 =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는 세금이다.
간접세 = 납세의무자가 낸 세금이 가격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어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다.

핵심 구분

목적세는 특정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다. 2025년 시행 법령상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법인세는 대표적인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재산에 누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직접세가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보다 소득재분배에 유리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목적세는 세수의 용도가 특정 사업에 묶이므로 해당 사업의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② O
「지방세기본법」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로 분류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다.

③ O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세이므로 국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④ O
법인세는 법인이 납세의무자이자 조세부담자가 되는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지만 그 부담이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다.

⑤ X
간접세는 소비에 부과되어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직접세보다 소득분배 개선에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틀린 표현: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분배의 개선에 유리하다.
올바른 표현: 일반적으로 직접세가 간접세에 비해서 소득분배의 개선에 유리하다.

오답 포인트

⑤의 '간접세가 소득분배 개선에 유리하다'는 표현이 함정이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같은 소비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부담률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는 누진세율 등을 통해 담세력에 따른 부담을 설계하기 쉬워 소득재분배에 더 유리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 분류 문제에서는 먼저 분류 기준을 확인한다. 사용 용도이면 목적세·보통세, 부과 주체이면 국세·지방세,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의 일치 여부이면 직접세·간접세로 판단한다. 분배 효과를 물으면 누진적 직접세는 재분배에 유리하고, 소비 중심 간접세는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지방교육세는 지방 목적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목적세, 법인세는 직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분배 개선에는 일반적으로 직접세가 더 유리하다.

NoteBase

문 4.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대체율(MRS)과 한계생산변환율(MRT)이 달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② 물품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③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④ 램지규칙에 의하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

⑤ 초과부담은 과세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차감해서 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세가 상대가격에 쐐기를 만들어 대체행동을 유발할 때 초과부담이 발생한다는 원리와 그 측정·최소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초과부담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왜곡하여 거래량과 자원배분을 효율적인 수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생기는 순후생손실이다. 조세로 인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 가운데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초과부담이다. 소득효과는 구매력 감소에 따른 반응이고, 대체효과는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반응이다. 초과부담의 핵심 원인은 상대가격 왜곡에 따른 대체효과이며, 두 효과의 방향이 반대라는 사실만으로 초과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물품세는 소비자가 마주하는 상대가격과 생산 측의 상대비용 사이에 쐐기를 만든다. 그 결과 소비자의 한계대체율(MRS)과 생산의 한계생산변환율(MRT)이 일치하지 않아 효율적 자원배분 조건이 깨진다.
② O — 물품세는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의 차이를 만든다. 이 가격 쐐기로 거래량이 효율적 수준보다 감소하면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두 효과의 방향이 반대이더라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가 존재하면 초과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향이 반대라는 사실만으로 초과부담이 소멸하지 않는다.
④ O — 램지규칙의 핵심은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하면서 총초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재화별 세율을 정하는 것이다. 최적점에서는 조세수입 1원을 추가로 얻을 때 생기는 한계초과부담이 재화 간에 같아진다.
⑤ O — 과세로 감소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에서 정부가 얻은 조세수입을 빼면 사회 전체의 순후생손실인 초과부담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이면 서로 상쇄되어 초과부담도 사라진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두 효과가 최종 수요량 변화에서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것과 상대가격 왜곡에서 생기는 초과부담이 없다는 것은 다른 주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초과부담 여부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을 더해서 판단하지 않고, 조세가 상대가격에 쐐기를 만들고 대체행동을 유발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측정 문제에서는 후생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차감하고, 최적과세 문제에서는 조세수입 1원당 한계초과부담의 균등화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 쐐기 → 대체행동 → 초과부담, 후생감소분 - 조세수입 = 초과부담이다.

NoteBase

문 5. 어떤 재화의 한계비용은 50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 = 100 - Q$이다.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① 조세수입은 600이다.

② 비효율성계수는 $\frac{3}{4}$이다.

③ 소비자잉여의 감소는 800이다.

④ 과세로 인한 공급자의 판매량 감소는 20이다.

⑤ 과세로 조세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수평인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보상수요곡선에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의 거래량, 조세수입, 초과부담, 비효율성계수 및 조세 귀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한계비용이 50으로 일정하므로 공급곡선은 가격 50에서 수평이다. 과세 전에는 수요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거래량이 결정된다. 공급자에게 단위당 20의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가 한 단위를 판매할 때 받아야 하는 소비자가격은 70이 된다.

사용할 공식

과세 전 거래량: $100 - Q_0 = 50$
과세 후 거래량: $100 - Q_1 = 50 + 20$
조세수입: $T = 20Q_1$
초과부담: $EB = \frac{1}{2} \times 20 \times (Q_0 - Q_1)$
비효율성계수: $\frac{EB}{T}$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직선이므로 초과부담은 과세로 사라진 거래에서 생기는 삼각형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과세 전에는 $100 - Q_0 = 50$이므로 $Q_0 = 50$이다.
2. 과세 후 소비자가격은 70이므로 $100 - Q_1 = 70$, 따라서 $Q_1 = 30$이다.
3. 조세수입은 $20 \times 30 = 600$이다.
4. 초과부담은 $\frac{1}{2} \times 20 \times (50 - 30) = 200$이다.
5. 비효율성계수는 세수 1단위당 초과부담이므로 $\frac{200}{600} = \frac{1}{3}$이다.
6. 소비자잉여는 과세 전 $\frac{1}{2} \times 50 \times 50 = 1,250$, 과세 후 $\frac{1}{2} \times 30 \times 30 = 450$이므로 800 감소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과세 후 거래량이 30이므로 조세수입은 $20 \times 30 = 600$이다.
② X. '비효율성계수는 $\frac{3}{4}$이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초과부담 200을 조세수입 600으로 나눈 $\frac{1}{3}$이다.
③ O. 소비자잉여는 1,250에서 450으로 줄어 감소분이 800이다.
④ O. 판매량은 50에서 30으로 줄어 감소량이 20이다.
⑤ O. 공급곡선이 가격 50에서 수평이므로 공급자가 받는 세후 순가격은 50으로 변하지 않고, 소비자가격만 50에서 70으로 오른다. 따라서 조세부담은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오답 포인트

②의 함정은 비효율성계수의 분모와 분자를 혼동하는 데 있다. 비효율성계수는 소비자잉여 감소분을 조세수입으로 나누는 값이 아니라, 초과부담을 조세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소비자잉여 감소 800에는 정부로 이전되는 조세수입 600과 순수한 후생손실인 초과부담 200이 함께 들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과세 전후의 소비자가격과 거래량을 구한 뒤, 조세수입은 세액과 과세 후 거래량의 곱으로, 초과부담은 세액과 거래량 감소분으로 만든 삼각형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성계수는 반드시 초과부담을 조세수입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평 공급에서는 조세가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되며, 비효율성계수는 '초과부담 ÷ 조세수입'이다.

NoteBase

문 6.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조세 그 자체만의 분배적 효과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종류의 조세를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했을 때 어떤 분배효과가 나오는가를 보는 것이다.

① 전방전가 조세귀착
② 후방전가 조세귀착
③ 균형예산 조세귀착
④ 차별적 조세귀착
⑤ 절대적 조세귀착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귀착의 분석 방법을 구분하고, 동일한 조세수입을 전제로 한 조세 간 대체가 차별적 조세귀착임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차별적 조세귀착은 한 조세를 동일한 조세수입을 거두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소득분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절대적 조세귀착은 정부지출을 일정하게 둔 채 특정 조세의 도입이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균형예산 조세귀착은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을 같은 규모로 함께 변화시킬 때의 분배효과를 분석한다.
전방전가는 조세 부담이 가격 상승을 통해 구매자에게 이동하는 것이고, 후방전가는 생산요소 가격이나 공급자 수취액의 하락을 통해 공급자 또는 생산요소 소유자에게 이동하는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전방전가는 조세가 가격 상승을 통해 구매자 쪽으로 이전되는 현상이다. 제시문에는 가격 상승이나 구매자에게로의 부담 이전이 없다. 틀린 표현은 '전방전가'이며, 올바르게는 '차별적 조세귀착'이다.
② X — 후방전가는 조세 부담이 공급자나 생산요소 소유자 쪽으로 이전되는 현상이다. 제시문에는 생산요소 가격이나 공급자 수취액의 하락이 없다. 틀린 표현은 '후방전가'이며, 올바르게는 '차별적 조세귀착'이다.
③ X — 균형예산 조세귀착은 조세수입의 변화와 정부지출의 변화를 같은 규모로 결합하여 분석한다. 제시문은 정부지출 변화가 아니라 조세 간 대체를 말한다. 틀린 표현은 '균형예산 조세귀착'이며, 올바르게는 '차별적 조세귀착'이다.
④ O —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오는 한 조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하여 분배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차별적 조세귀착의 정의에 해당한다.
⑤ X — 절대적 조세귀착은 정부지출을 일정하게 둔 채 특정 조세 자체의 분배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처럼 동일 세수의 다른 조세와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절대적 조세귀착'이며, 올바르게는 '차별적 조세귀착'이다.

오답 포인트

'조세 그 자체만의 효과'라는 표현만 보고 절대적 조세귀착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구는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이다. 조세 간 교체와 비교가 나타나면 차별적 조세귀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일 세수의 조세 A를 조세 B로 바꾸어 비교하면 차별적 조세귀착, 조세와 정부지출을 같은 규모로 함께 바꾸면 균형예산 조세귀착, 정부지출을 고정하고 특정 조세의 효과만 보면 절대적 조세귀착으로 판단한다. 부담이 구매자에게 가면 전방전가, 공급자나 생산요소 소유자에게 가면 후방전가이다.

암기 포인트

조세 대 조세는 차별적, 조세와 지출의 동시 변화는 균형예산, 조세 하나의 효과는 절대적 조세귀착이다.

NoteBase

문 7.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② 부가가치세는 생산단계마다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③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④ 경제적 이윤에 대한 법인세과세방식은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게 된다.

⑤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면세와 법인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영세율과 면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의 기업조직 중립성, 경제적 이윤 과세와 이자비용 공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이다.

용어 풀이

영세율은 과세거래에 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출세액은 0이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하는 제도이다. 면세는 해당 공급을 과세에서 제외하므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제도이다. 경제적 이윤은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자기자본의 정상수익을 포함한 기회비용까지 뺀 초과이윤이다.

핵심 구분

부가가치세법은 수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세율은 '매출세액 0·매입세액 공제'이고, 면세는 '매출세액 없음·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이다. 또한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한계적 생산·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타인자본의 이자만 비용으로 공제하면 부채조달의 세후비용이 낮아져 자금조달 선택이 왜곡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이므로 수출품의 매출세액은 0이지만 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제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될 수 있다.
틀린 표현: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수출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② X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단계의 부가가치만 과세하므로, 거래단계 수나 기업 내부생산 여부에 따른 누적과세를 피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수직적 통합에 대해 중립적이다.
틀린 표현: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올바른 표현: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는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지 않고 기업조직에 대해 중립적이다.'

③ O
면세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앞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영세율과 달리 면세는 매입세액 공제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④ X
경제적 이윤은 정상수익을 포함한 모든 기회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초과이윤이다.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한계비용이나 정상수익을 바꾸지 않으므로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게 된다.'
올바른 표현: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

⑤ X
타인자본의 이자비용만 공제하고 자기자본의 정상수익은 공제하지 않으면 타인자본 조달의 세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기업은 자기자본보다 부채를 더 선호하게 되므로 자금조달방식이 왜곡된다.
틀린 표현: '투자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타인자본의 이자비용만 공제하면 부채조달을 우대하여 투자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을 가져온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영세율과 면세 모두 매출 단계의 세금이 없다는 공통점만 보고 매입세액 처리까지 같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면세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②는 거래 단계마다 세금을 계산한다는 사실을 누적과세로 오해하게 하고, ④·⑤는 경제적 이윤 과세의 중립성과 이자비용 공제가 만드는 부채편향을 뒤집어 제시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가가치세 선지는 먼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따로 본다. '매출세액 0·매입세액 공제'이면 영세율, '매출세액 없음·매입세액 불공제'이면 면세이다. 법인세 선지는 정상수익까지 비용으로 인정하는지와 부채·자기자본을 대칭적으로 취급하는지를 확인한다. 경제적 이윤만 과세하면 생산결정에 중립적이고, 이자만 공제하면 부채편향이 생긴다.

암기 포인트

영세율은 0% 과세라 매입세액 공제, 면세는 과세 제외라 매입세액 불공제이다. 경제적 이윤 과세는 생산에 중립적이고, 이자만 공제하면 부채편향이 생긴다.

NoteBase

문 8.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개인은 세율이 올라 순소득이 줄어들면 위험부담의 크기를 줄여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② 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율의 증가는 탈루소득을 감소시킨다.

④ 세율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루소득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

⑤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알링햄-샌드모 모형에서 세율 인상이 탈루소득에 미치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납세자가 적발확률과 벌금을 고려하여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신고소득 또는 탈루소득을 선택한다고 본다.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면 소득 감소로 위험감수 성향이 낮아지는 소득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지만, 세율 상승으로 탈세의 상대적 이익이 커지는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늘린다. 두 효과가 반대이므로 세율 인상의 총효과는 일반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세율 상승으로 순소득이 감소하면,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납세자는 낮아진 소득에서 위험부담을 줄이려 한다. 따라서 소득효과는 위험한 선택인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인다'이다. 세율이 오르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절약하는 세액이 커지므로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은 증가하고,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O — 감사받을 확률이 높아지면 적발 가능성이 커지고, 벌금률이 높아지면 적발 시 손실이 커진다. 모두 탈루의 기대효용을 낮추므로 탈루소득이 감소한다.
④ O — 세율 상승의 소득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고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늘린다.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탈루소득의 총변화 방향도 단정할 수 없다.
⑤ O — 이 모형의 해당 비교정태 결과는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는 가정을 이용한다. 소득이 낮아질수록 같은 절대적 위험을 덜 부담하려는 성질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는 세율 상승으로 순소득이 감소한다는 사실과 탈세의 상대적 이익 변화를 뒤섞었다. 순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지만, 세율 상승 자체의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을 높여 탈루소득을 늘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율 변화는 '소득효과는 탈루 감소, 대체효과는 탈루 증가'로 나누어 판단한다. 반면 적발확률이나 벌금률의 상승은 탈루의 기대손실을 높이므로 탈루소득을 감소시킨다.

암기 포인트

세율 상승: 소득효과는 탈루 감소, 대체효과는 탈루 증가, 총효과는 불확정이다. 적발확률·벌금률 상승: 탈루 감소이다.

NoteBase

문 9.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

③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 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④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⑤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는 소득으로 실현된 경우에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소득 개념,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누진성의 판별 기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묻는다.

핵심 개념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소득은 일정 기간의 소비와 순자산 증가액을 합한 경제적 능력의 증가이다.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가치의 증가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소득세로 세후임금이 하락하면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득효과는 여가가 정상재일 때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누진세에서는 소득 증가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전체 소득에 대한 평균세율보다 높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절세액이 더 크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소득세제는 소비와 순자산 증가를 통해 나타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과세 기준으로 삼으므로 능력원칙에 기반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이다. 근로소득세로 세후임금이 낮아지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하락하므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여가가 정상재라면 소득효과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 누진성이 증가한다'이다. 누진세에서는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아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이 상승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이다. 소득공제의 절세액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적용한 만큼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 일정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⑤ X. 틀린 표현은 '실현된 경우에만'이다.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소득은 소비와 순자산 증가를 포함하므로 미실현 자본이득도 경제적 능력의 증가로 보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서로 바꾼 함정이다. ③은 누진세에서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의 대소관계를 뒤집었고, ④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한계세율에 비례한다는 점을 반대로 제시했다. ⑤는 포괄소득 개념을 실현주의와 혼동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로소득세는 세후임금 하락부터 출발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나누어 판단한다. 누진성은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을 비교하고, 공제의 효과는 과세표준을 줄이는지 세액을 직접 줄이는지 구분한다. 포괄소득은 소비와 순자산 증가를 함께 포착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포괄소득은 소비와 순자산 증가, 누진세는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큼, 소득공제는 고세율자에게 더 큰 절세효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0.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① 국민저축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②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③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한다.

④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⑤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자소득세가 세후이자율을 낮출 때 현재소비와 저축에 작용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효과: 세후이자율이 하락하면 미래소비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미래소비 대신 현재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한다.
소득효과: 이자소득세로 저축자의 실질적인 생애소득이 감소한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므로 두 소비가 모두 감소하며, 현재소비의 감소는 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재소비와 저축의 최종 변화는 서로 반대인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려 저축을 줄이지만,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린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국민저축의 최종 변화는 단정할 수 없다.
② O. 현재소비에 대한 대체효과는 증가 방향이고 소득효과는 감소 방향이므로, 최종 변화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③ O. 이자소득세는 저축자의 실질적인 생애소득을 감소시킨다. 현재소비가 정상재이므로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이다. 실제로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감소시켜 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은 대체효과이다.
⑤ O. 세후이자율 하락의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증가시키고, 정상재에 대한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감소시킨다.

오답 포인트

세후이자율 하락이 저축을 줄인다는 결론을 소득효과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④를 옳다고 오해하기 쉽다. 저축 감소는 대체효과의 방향이고,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는 방향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후이자율이 하락하면 먼저 대체효과를 '현재소비 증가·저축 감소'로 잡고, 정상재의 소득효과를 '현재소비 감소·저축 증가'로 잡는다. 두 효과가 반대이면 최종 변화는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자소득세: 대체효과는 저축 감소, 소득효과는 저축 증가, 총효과는 불확정이다.

NoteBase

문 11.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②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③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④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조세의 존재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⑤ 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현행 조세제도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투자 사이의 관계, 즉시 비용처리의 투자 중립성, 한계실효세율의 부호가 뜻하는 투자 유인과 자금조달 유인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 한 단위를 보유·사용하는 데 부담하는 기회비용이다.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이 원하는 자본스톡과 투자가 증가한다.
한계실효세율은 추가 투자에서 발생하는 한계수익에 조세가 주는 부담을 나타낸다. 양(+)이면 조세 부담, 0이면 중립, 음(-)이면 조세보조의 효과가 있음을 뜻한다.
즉시 비용처리는 투자비 전액을 취득 시점에 공제하는 방식이다. 지급이자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과 결합하면 한계투자의 정상수익에 대한 조세부담이 상쇄되어 투자에 중립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을수록 기업이 원하는 자본스톡이 커지므로 투자가 증가한다.
② O —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사용자비용이 변해도 원하는 자본스톡이 조금만 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정책이 사용자비용을 바꾸더라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③ O — 자본재 구입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하고 지급이자는 공제하지 않으면 투자비 공제의 현재가치가 세전 투자비와 같은 비율로 적용된다. 이 경우 한계투자의 정상수익에 대한 세부담이 상쇄되므로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④ O —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라는 것은 조세제도가 한계투자에 순부담이 아니라 순보조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가 없을 때보다 요구되는 세전수익률이 낮아져 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이다. 부채를 통한 투자의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부채투자에 조세보조가 주어져 부채조달의 상대적 매력이 커진다. 올바르게는 현행 조세제도가 기업의 부채의존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오답 포인트

⑤는 '음(-)의 세율'을 불리한 부담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라는 것은 세금을 더 부담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세보조를 받는다는 뜻이므로, 부채의존도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조세가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올리는지 내리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한계실효세율의 부호를 '양(+)은 부담, 0은 중립, 음(-)은 보조'로 해석한다. 특정 자금조달 방식의 한계실효세율이 더 낮거나 음(-)이면 그 방식의 이용 유인이 커진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용자비용 하락은 투자 증가, 한계실효세율 음(-)은 투자 보조, 부채의 음(-) 세율은 부채의존도 증가이다.

NoteBase

문 12.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투자가 억제되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ㄴ. 통화주의자는 호황기보다 경기 침체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ㄷ.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ㄹ.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다.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을 국채로 조달할 때 국채의 인수 주체에 따라 이자율, 민간투자, 통화량 및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중 소화: 민간이 국채를 인수하면 자금시장에서 정부의 자금 수요가 늘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 효과의 상쇄를 구축효과라고 한다.
중앙은행 인수: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본원통화와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시중 소화 때보다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 위축이 완화되고 총수요 증대효과가 커진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도 커진다.
경기 국면: 통화주의 관점에서는 유휴자원이 많은 침체기보다 생산능력의 제약이 큰 호황기나 완전고용 부근에서 재정지출이 민간지출을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ㄱ, ㄷ, ㄹ은 옳고 ㄴ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ㄹ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고, 옳은 ㄱ과 ㄷ도 빠져 있다. 틀린 조합인 'ㄴ, ㄹ'은 'ㄱ,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으며, 옳은 ㄹ이 빠져 있다. 틀린 조합인 'ㄱ, ㄴ, ㄷ'은 'ㄱ,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③ O — ㄱ은 시중 소화에 따른 구축효과, ㄷ은 중앙은행 인수에 따른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압력, ㄹ은 통화금융 때의 더 큰 총수요 증대효과를 각각 정확히 설명한다.
④ X —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틀린 조합인 'ㄴ, ㄷ, ㄹ'은 'ㄱ,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ㄴ을 옳은 진술에 포함한 부분이 틀렸다. '호황기보다 경기 침체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는 표현은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나 완전고용 부근에서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로 고쳐야 하므로, 옳은 조합은 'ㄱ, ㄷ, ㄹ'이다.

오답 포인트

국채발행을 모두 같은 방식의 재원조달로 보면 ㄹ을 놓치기 쉽다. 민간이 국채를 사는 시중 소화는 이자율 상승을 통해 구축효과를 만들지만, 중앙은행 인수는 통화량까지 늘려 그 구축효과를 줄이고 총수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키운다. 또한 ㄴ은 경기 국면의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국채의 인수 주체를 구분한다. 민간 인수이면 '자금수요 증가 → 이자율 상승 → 민간투자 감소'를, 중앙은행 인수이면 '통화량 증가 → 이자율 상승 억제 → 총수요 효과 확대와 물가상승 압력'을 연결한다. 경기 국면을 묻는 경우에는 침체기보다 호황기·완전고용 부근에서 구축효과가 크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시중 소화는 구축효과, 중앙은행 인수는 통화증가·총수요 확대·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된다. 구축효과는 침체기보다 호황기·완전고용 부근에서 더 크다.

NoteBase

문 13.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② 완전손실보상제도 하에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부문과 같다면, 조세의 부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③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④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

⑤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비례소득세가 위험자산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완전손실보상 여부와 소득효과·대체효과의 방향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손실보상제도는 위험자산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손실도 같은 세율만큼 보상하여 정부가 이익과 손실을 대칭적으로 분담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세후 위험노출이 줄어든 만큼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생긴다.

손실보상이 없으면 손실은 투자자가 전부 부담하면서 이익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세후 수익성을 낮추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지만,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면 세금으로 소득이 감소할 때 위험부담을 늘리는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이다. 완전손실보상에서는 정부가 손실도 분담하므로 투자자의 세후 위험노출이 감소하고, 투자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위험자산 비중을 늘린다.
② X — 틀린 표현은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이다. 정부와 민간의 위험부담 비용이 같다면 위험이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되는 것 자체로 사회적 위험부담 비용이 줄지 않으므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보다 낮을 때 사회후생 증진 가능성이 생긴다.
③ O — 손실보상이 없을 때 대체효과는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지만,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므로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위험자산 비중을 늘린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순효과로 위험자산 비중이 증가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이다. 손실보상 없이 이익에만 세금이 부과되면 위험자산의 상대적 세후 수익성이 낮아지므로 대체효과는 위험자산 비중을 줄인다.
⑤ X — 틀린 표현은 '투자 수익과는 달리'이다. 완전손실보상에서는 손실뿐 아니라 투자 수익도 정부와 투자자가 함께 분담한다. 정부는 수익에서 세금을 받고 손실에서는 같은 세율만큼 보상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핵심 함정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다. 손실보상이 없을 때 대체효과만 보면 위험자산이 감소하지만, 위험부담행위가 열등적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위험자산을 증가시킨다. 두 효과의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손실보상 여부를 확인한다. 완전손실보상이면 정부가 이익과 손실을 대칭적으로 분담하므로 위험자산 확대 유인이 생긴다. 손실보상이 없으면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을 줄이고,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음수일 때 소득효과는 위험자산을 늘리므로 어느 효과가 큰지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손실보상은 이익·손실의 대칭 분담, 무손실보상은 대체효과 감소·음의 소득탄력성에 따른 소득효과 증가이다.

NoteBase

문 14. 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② 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④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⑤ 티부(C. Tiebout)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개인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면 지역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시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중앙집권화율의 정확한 분자와 오우츠의 분권화정리·티부모형이 설명하는 지방분권의 효율성 논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앙집권화율: 정부부문 총지출 가운데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한 금액의 비율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활동 배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한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직접지출에서 제외한다.
오우츠의 분권화정리: 공급비용이 같고 지역별 선호가 다르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같은 양을 공급하는 것보다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적합한 양을 공급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이론이다.
티부모형: 여러 지역사회의 조세·공공서비스 조합 가운데 주민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발에 의한 투표'를 통해 지역공공재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모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분자를 '중앙정부의 총지출'이라고 한 부분이다.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직접지출 / 정부부문 총지출이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한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직접지출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총지출'은 '중앙정부의 직접지출'로 고쳐야 한다.
② O — 오우츠의 분권화정리는 지역공공재의 공급비용이 어느 정부 단계에서나 같다면, 지역별 선호에 맞추어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공급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본다.
③ O — 지방정부는 지역 사정을 더 잘 반영하여 서로 다른 정책을 시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다양성과 실험 가능성은 지방분권의 장점이다.
④ O — 지역마다 조세와 공공서비스의 조합이 다르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이동할 수 있으면 선호에 따른 주민 분류가 이루어져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티부모형의 논리와 부합한다.
⑤ O — 티부는 다수의 지역사회와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주민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면 선호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지역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오답 포인트

①은 비율의 명칭이나 분모가 아니라 '총지출'과 '직접지출'의 차이를 묻는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준 보조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출로 잡으면 실제 지출 주체를 기준으로 한 중앙집권화율의 분자가 부정확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앙집권화율에서는 먼저 분자가 중앙정부의 '직접지출'인지 확인한다. 지역별 선호에 맞춘 공급은 오우츠, 주민의 지역 선택과 이동은 티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 실험은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집권화율은 중앙의 직접지출, 오우츠는 지역별 맞춤 공급, 티부는 발에 의한 투표이다.

NoteBase

문 15. 국가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상환에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③ 러너(A. Lerner)의 국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외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④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 정부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⑤ 중복세대모형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채 발행이 저축·이자율·환율·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와 국가채무의 세대 간 부담, 이자율과 국채가격의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리카도 대등정리: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미래의 국채 상환을 위한 증세를 예상하여 현재 저축을 늘리므로, 국채로 조달한 감세의 총수요 효과가 상쇄된다는 이론이다.
국채가격과 이자율: 기존 국채가 지급하는 원리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존 국채의 시장가치는 상승한다.
국채 부담의 세대 간 이전: 외국에 갚아야 하는 외부채무와 현재 세대가 편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가 상환하는 중복세대모형의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민간은 미래 증세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린다. 국채 발행에 따른 자금 수요가 민간저축 증가로 충당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고 민간투자가 밀려나는 구축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② O. 국채 발행 증가는 이자율을 높여 해외자본 유입을 유발한다. 원화 수요가 늘어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하고,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순수출 및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③ O. 러너의 전통적 견해에서 내부채무는 한 국민이 다른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국민 전체의 직접적인 실질부담으로 보지 않지만, 외부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외국으로 실질자원이 이전되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④ X. 틀린 표현은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이다. 기존 국채의 원리금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자율과 국채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므로,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상승시켜 시장가치로 평가한 정부부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⑤ O. 중복세대모형에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애가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 현재 세대가 국채 발행의 편익을 누리고 상환을 미래 세대가 담당할 수 있으므로 국가채무의 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이자율 하락과 국채가격 하락을 같은 방향으로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새로 발행되는 국채의 이자율과 기존 국채의 시장가격을 혼동하면 안 된다. 시장이자율이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주는 기존 국채의 가격은 올라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채 효과는 세 축으로 판단한다. 리카도 대등정리에서는 저축 증가가 재정확대 효과를 상쇄하고, 개방경제에서는 이자율 상승이 자본 유입·통화가치 상승·순수출 감소로 이어지며, 기존 국채의 가격은 시장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인다.

암기 포인트

리카도는 저축으로 상쇄, 외채·중복세대는 미래 부담, 국채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인다.

NoteBase

문 16.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입증한 것이다.
ㄴ. 기업의 수익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ㄷ. 경영자와 주주 간에 주인-대리인 문제가 있다고 가정한다.
ㄹ. 모든 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ㅁ. 기업의 파산과 관련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ㄹ,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모딜리아니-밀러(MM)의 제1명제가 성립하는 완전자본시장 가정과 그 결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M 제1명제는 법인세가 없고, 파산비용·대리인비용·정보비대칭 등 시장의 마찰이 없는 완전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하다는 명제이다. 따라서 부채와 자기자본의 구성만 바꾸어 기업가치를 높이는 최적 자본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ㄱ X: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한다는 설명이 아니라 자본구조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ㄴ O: 기업의 수익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금 상황을 가정한다.
ㄷ X: 주인-대리인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비용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ㄹ O: 모든 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은 정보를 가진다는 완전정보를 가정한다.
ㅁ O: 파산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ㄷ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주인-대리인 문제도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O — ㄴ의 무세금, ㄹ의 완전정보, ㅁ의 파산비용 부재는 모두 MM 제1명제의 가정에 해당한다.
③ X — ㄷ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주인-대리인 문제와 그에 따른 대리인비용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옳은 조합은 ㄴ, ㄹ, ㅁ이다.
④ X — ㄱ과 ㄷ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자본구조와 기업가치가 무관하고 주인-대리인 문제도 없다고 가정하므로 ㄴ과 ㄹ만으로도 이 선택지의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X — ㄱ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특정 자본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옳은 진술의 조합은 ㄴ, ㄹ, ㅁ이다.

오답 포인트

ㄱ의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입증'이라는 표현이 핵심 함정이다. MM 제1명제의 결론은 정반대로, 이상적인 완전자본시장에서는 자본구조가 기업가치를 바꾸지 않는다는 자본구조 무관련성이다. 또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와 파산비용을 이 명제의 기본 가정으로 혼동하면 ㄷ과 ㅁ의 판단이 뒤바뀐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MM 제1명제의 기본형에서는 세금·거래비용·파산비용·대리인비용·정보비대칭과 같은 시장 마찰을 제거한다. 선지에 이러한 마찰이 '존재한다'고 나오면 틀린 진술로 판단하고, 결론은 '기업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하다'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MM 제1명제의 기본형은 '세금·파산비용·대리인비용·정보비대칭 없음 → 자본구조 무관련'이다.

NoteBase

문 17.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② 대응교부금은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③ 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다.

⑤ 무조건부 교부금은 대응교부금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 측면에서 우월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정부 간 교부금의 효과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구분하고, 끈끈이 효과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조건부 교부금은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정액 교부금으로, 지방정부의 예산선을 평행 이동시켜 소득효과만 발생시킨다.
대응교부금은 지방정부가 특정 공공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에 비례하여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교부금으로, 해당 공공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낮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함께 발생시킨다.
끈끈이 효과는 주민의 소득이 같은 금액만큼 증가했을 때보다 중앙정부 교부금이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더 크게 늘리는 현상이다. 즉 교부금이 민간부문으로 빠져나가기보다 공공부문에 붙어 있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끈끈이 효과는 교부금이 같은 규모의 주민소득 증가보다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현상이다. 따라서 올바르게는 '보조금이 지방세 인하나 민간지출 증가로 이어지기보다 지방정부 지출에 더 많이 남는 현상'이라고 해야 한다.
② O — 대응교부금은 보조 대상 공공재의 지방정부 부담가격을 낮춰 그 공공재 쪽으로 선택을 바꾸는 대체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상대가격 변화는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부 교부금과 비교하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③ O — 무조건부 교부금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고 소득효과만 발생시킨다. 따라서 대응교부금의 대체효과에서 생기는 자원배분 왜곡을 억제할 수 있다.
④ O —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보조 대상 사업과 용도가 정해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건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다. 지방비 부담이 결합되면 대응교부금의 성격도 나타난다.
⑤ O — 같은 규모의 재정지원이라면 무조건부 교부금은 용도를 제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선호하는 지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대응교부금은 특정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바꾸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후생 증가 측면에서 무조건부 교부금이 우월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교부금이 주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일반적인 소득효과와 끈끈이 효과를 뒤바꾼 선지이다. ‘끈끈이’는 돈이 민간지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에 붙는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용처 제한이 없으면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소득효과만, 특정 지출에 비례하여 보조하면 상대가격이 낮아지므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함께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끈끈이 효과는 교부금과 동일액의 주민소득 증가가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무조건부는 소득효과만, 대응교부금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끈끈이 효과는 교부금이 공공지출에 붙는 현상이다.

NoteBase

문 18.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으면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형이다.
ㄴ. 여가가 정상재이고 비례소득세 부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ㄷ. 여가가 열등재일 때 중립세로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근로소득세가 순임금을 변화시킬 때 노동공급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중립세에는 어떤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임금이 오르면 여가의 기회비용도 오른다. 대체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지만, 여가가 정상재일 때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 따라서 임금 상승 시 대체효과가 더 크면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소득효과가 더 크면 후방굴절한다.
비례소득세는 순임금을 낮추므로 상대가격을 바꾸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모두 일으킨다. 중립세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 정액세이므로 소득효과만 일으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리다. 여가가 정상재이고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으면 노동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우세하므로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틀린 표현은 '후방굴절형'이며, 올바르게는 '우상향한다'이다.
② O — ㄷ은 옳다. 여가가 열등재이더라도 중립세는 순임금과 여가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없고 소득효과만 존재한다. 따라서 옳은 진술은 ㄷ뿐이다.
③ X — ㄱ과 ㄴ이 모두 틀리다. ㄱ은 대체효과가 더 크므로 후방굴절형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ㄴ은 비례소득세가 순임금을 낮출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여가가 늘고 노동공급은 줄어든다. 올바른 조합은 'ㄷ'이다.
④ X —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다. ㄴ의 '노동공급은 늘어난다'가 잘못되었으며, 올바르게는 '노동공급은 줄어든다'이다. 따라서 ㄴ과 ㄷ을 함께 고를 수 없다.
⑤ X — ㄷ만 옳고 ㄱ과 ㄴ은 틀리다. ㄱ은 우상향하는 경우를 후방굴절형이라고 바꾸어 썼고, ㄴ은 노동공급 감소를 증가로 바꾸어 썼다. 올바른 조합은 'ㄷ'이다.

오답 포인트

임금 변화의 방향을 뒤집어 생각하기 쉽다. 임금 상승에서는 대체효과가 노동을 늘리지만, 비례소득세로 순임금이 하락하면 같은 대체효과가 노동을 줄인다. 또한 후방굴절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때 나타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금이 순임금이라는 상대가격을 바꾸는지 확인한다. 비례소득세이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모두 비교하고, 중립세이면 소득효과만 판단한다. 임금 상승을 기준으로 대체효과 우세는 노동 증가·우상향, 정상재인 여가의 소득효과 우세는 노동 감소·후방굴절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대체효과 우세는 우상향, 소득효과 우세는 후방굴절이다. 비례소득세는 두 효과, 중립세는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NoteBase

문 19.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효율적이다.

②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볼 수 있다.

③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비효율적이다.

④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⑤ 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자연독점에서 한계비용 가격설정, 평균비용 가격설정, 램지 가격설정이 효율성·수지 균형·가격할증에 미치는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계비용 가격설정: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는 방식이다. $P = MC$이므로 자원배분은 효율적이지만, 자연독점에서는 일반적으로 $MC < AC$이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평균비용 가격설정: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 정해 수입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P = AC$이므로 손실은 피하지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공급량이 효율적 수준보다 작다.
램지 가격설정: 여러 서비스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면서 후생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서비스에 더 큰 가격할증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한계비용 대비 가격할증은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역의 관계에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P = MC$가 되게 하므로 소비자의 한계편익과 생산의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자원배분상 효율적이다.
② O. 자연독점은 관련 생산구간에서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따라서 $P = MC$로 요금을 정하면 수입이 총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생산기관이 손실을 볼 수 있다.
③ O. 평균비용 가격설정에서는 $P = AC > MC$가 된다.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수요량과 공급량이 한계비용 가격설정 때보다 작으므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④ O.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P = AC$로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지게 하므로 생산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고 정상수익 수준에서 수지를 맞출 수 있다.
⑤ X. 틀린 표현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한다는 부분이다. 램지 원칙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한계비용에 대한 가격할증을 더 크게 하고,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더 가깝게 설정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가격탄력성이 작은 수요에는 가격 변화로 인한 수량 감소가 작다'는 사실을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정한다는 결론으로 뒤집은 선지이다. 램지 원칙은 탄력성이 작을수록 더 큰 할증, 탄력성이 클수록 더 작은 할증을 적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요금과 비용의 관계를 본다. $P = MC$이면 효율적이지만 적자 가능성이 있고, $P = AC$이면 수지는 균형이지만 공급량이 과소하다. 램지 가격은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가격할증이 반대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한계비용 가격은 효율·적자, 평균비용 가격은 수지 균형·과소공급, 램지 가격은 저탄력·고할증이다.

NoteBase

문 20. 정부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은?

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②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③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세정책이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④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의 금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⑤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감세가 가처분소득·소비·총수요에 미치는 방향과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크기 차이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구축효과가 없고 한계소비성향을 c, 정부지출 변화를 ΔG, 조세 변화를 ΔT라고 한다. 정부지출승수는 $1/(1-c)$, 조세승수는 $-c/(1-c)$이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정부지출 변화가 조세 변화보다 총수요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사용할 공식

소득 및 총수요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Delta Y = \frac{1}{1-c}\Delta G - \frac{c}{1-c}\Delta T$

정부지출은 그 전액이 총수요에 직접 반영되지만, 감세액은 가처분소득을 거쳐 그중 소비되는 부분만 1차적으로 총수요에 반영되므로 두 승수의 크기가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감세는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와 소득을 증가시킨다. 소득 증가에 따라 거래적 화폐수요도 증가한다. 틀린 표현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는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화폐수요가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감세로 가처분소득이 늘면 소비지출이 증가하여 총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틀린 표현인 '소비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소비지출이 증가하여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감세가 민간저축을 늘릴 수는 있지만 정부저축을 줄이므로 국민저축이 대폭 증가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으며, 경험적 연구에서도 그러한 큰 증가가 일관되게 확인된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인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킨다는 뚜렷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동일 금액이라도 정부지출승수의 절댓값 $1/(1-c)$이 조세승수의 절댓값 $c/(1-c)$보다 크다. 틀린 표현인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는 '정부지출 증가의 총수요 확대 효과가 감세의 효과보다 크다'로 고쳐야 한다.

⑤ O — 정부지출을 X만큼 줄이고 세금도 X만큼 감면하면 $\Delta G = -X$, $\Delta T = -X$이다.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Delta Y = -X/(1-c) + cX/(1-c) = -X$가 되어 총수요가 감소한다. 정부지출 감소액과 감세액이 같으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재정적자의 변화는 없다.

오답 포인트

④와 ⑤의 함정은 감세와 정부지출 변화의 금액이 같으면 총수요 효과도 같다고 보는 데 있다. 감세액 중 일부는 저축되지만 정부지출은 전액이 총수요에 직접 들어가므로 승수의 크기가 다르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금액의 정부지출 감소와 감세를 결합하면 총수요는 그 금액만큼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세는 가처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총수요 증가의 순서로 판단한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함께 바꾸는 문제에서는 $\Delta Y = [1/(1-c)]\Delta G - [c/(1-c)]\Delta T$에 각각의 부호를 넣어 효과를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정부지출승수의 절댓값은 조세승수보다 1만큼 크며,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금액만큼 함께 줄이면 균형재정승수에 따라 총수요도 그 금액만큼 감소한다.

NoteBase

문 21. 공공재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① 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② 순수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상수도는 공공재의 예이다.

④ 모든 소비자는 등량의 공공재 소비로부터 항상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는다.

⑤ 소비자들은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공공재의 비경합성·비배제성과 그로 인한 무임승차 및 시장실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이다.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가지므로 개별 이용자에게 가격을 부과하기 어렵고,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에서 효율적인 양이 공급되기 어렵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비경합성'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비배제성이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거나 그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다.

② O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이용자를 가려 가격을 부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임승차가 발생하고 민간시장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되거나 공급되지 않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③ X
틀린 표현은 상수도를 공공재의 예라고 한 부분이다. 상수도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공급을 차단할 수 있어 배제가 가능하고, 공급 용량이 제한되어 소비의 경합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순수공공재가 아니다. 지방정부가 공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경제학적 공공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X
틀린 표현은 '항상 같은 수준의 효용'이다. 공공재는 여러 소비자가 같은 공급량을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지만, 각 소비자의 선호와 한계편익은 다를 수 있으므로 얻는 효용까지 같지는 않다.

⑤ X
틀린 표현은 '수요를 정확하게 표출한다'이다. 비배제성 때문에 소비자는 비용 부담을 피하면서 편익을 얻으려는 무임승차 유인을 가지므로 자신의 진정한 지불의사와 수요를 과소 표출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정의를 바꾸어 놓았고, ③은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경제학적 공공재'를 같은 것으로 보게 만든다. ④에서는 동일한 양을 공동 소비한다는 사실과 동일한 효용을 얻는다는 주장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드는지는 경합성,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있는지는 배제성으로 판단한다. 공급 주체가 정부인지보다 재화 자체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비경합성은 함께 소비, 비배제성은 이용 차단 곤란, 그 결과는 무임승차와 과소공급이다.

NoteBase

문 22.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라면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②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반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③ 애로우(K. Arrow)는 완벽한 조건부거래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음을 밝혔다.

④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중립세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파레토 효율성, 완전한 조건부거래시장,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파레토 효율성은 누구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을 더 높이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완전경쟁, 완전시장 등 필요한 가정이 충족될 때 일반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가격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이나 생산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이를 내부화하려면 한계적 의사결정을 바꾸는 교정세·보조금 등이 필요하며, 상대가격과 유인을 바꾸지 않는 중립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효율적인 배분에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 누군가의 후생을 높이는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는 파레토 효율성의 정의이다.
② O.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필요한 경쟁시장 가정이 충족된 일반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내용이다.
③ O. 미래의 각 상태에 대응하는 조건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완전한 조건부거래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도 시장에서 배분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④ X. 틀린 표현은 '중립세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이다. 중립세는 경제주체의 한계적 선택과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외부불경제의 경우 한계외부비용을 반영한 피구세와 같은 교정세를 부과하여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⑤ O. 도덕적 해이는 거래 또는 계약 이후 한쪽의 행동을 다른 쪽이 완전히 관찰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이며, 비효율적인 행동과 자원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세금이면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뭉뚱그리는 데 있다.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핵심은 세금의 존재가 아니라 외부비용 또는 외부편익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한계적 유인을 바꾸는 것이다. 중립세와 피구세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율성 문항에서는 먼저 파레토 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실패 문항에서는 외부효과·정보 비대칭·불완전시장 등의 원인이 가격과 유인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한다. 정책수단이 제시되면 그 수단이 한계비용이나 한계편익을 실제로 변화시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파레토 효율은 개선 불가능, 완전시장은 위험거래 가능, 외부효과는 피구적 교정, 도덕적 해이는 계약 후 정보 비대칭이다.

NoteBase

문 23.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② 중립세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③ 비용체감산업에 대한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④ 정부의 중고차 정비이력 의무화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⑤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늦게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조건과 정보비대칭·역선택의 보완 방식, 비용체감산업의 가격규제 원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만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태이다. 다만 시장실패가 존재해도 정부개입의 편익이 행정비용과 정부실패의 비용보다 커야 실제 개입이 정당화된다.
중립세는 상대가격과 민간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조세이다.
정보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보의 양이나 질이 다른 상태이고, 역선택은 거래 전에 정보가 부족한 쪽이 불리한 상대를 더 많이 선택하게 되는 현상이다.
비용체감산업은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산업이다. 이때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P = AC$로 수지를 맞추지만, $MC < AC$이므로 $P > MC$가 되어 배분상 비효율이 남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시장실패는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을 검토하게 하는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정부개입 자체에도 비용과 정부실패가 있으므로 시장실패만으로 개입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② O — 중립세는 재화 간 상대가격이나 노동·저축·투자 선택의 유인을 바꾸지 않으므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하지 않는다.
③ X — 틀린 표현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이다. 비용체감산업에서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P = AC$로 독점기업의 초과이윤을 없애고 손익분기만 달성하게 할 뿐, $P > MC$이므로 배분상 비효율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한계비용 가격설정인 $P = MC$가 배분상 효율을 달성하며, 이 경우 기업의 적자는 보조금 등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④ O — 중고차의 정비이력을 공개하게 하면 판매자가 가진 품질정보가 구매자에게 전달되어 정보비대칭과 레몬시장 문제를 완화한다.
⑤ O — 자발적 가입에서는 연금을 오래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가입자가 편중될 수 있다. 강제 가입은 은퇴 시점과 예상 수급기간이 다른 근로자들을 함께 위험집단에 포함시키며, 늦게 은퇴하여 예상 수급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가입도 유도하므로 역선택을 완화한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 평균비용 가격설정이 독점기업의 초과이윤을 없앤다는 사실을 독점의 모든 비효율을 없앤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비용체감산업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므로 $P = AC$여도 $P > MC$가 남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규제 선지는 가격과 비용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P = AC$이면 기업의 수지균형, $P = MC$이면 배분상 효율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보비대칭 선지는 정보공개가 정보 격차를 줄이는지, 강제 가입이 위험집단을 넓혀 역선택을 줄이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평균비용 가격은 수지균형, 한계비용 가격은 배분효율이다. 정보공개는 정보비대칭을 줄이고, 강제 가입은 역선택을 줄인다.

NoteBase

문 24.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U_A = 3\sqrt{X_A}$, $U_B = \sqrt{X_B}$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_A, U_B\}$로 가정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X_i > 0 (i = A, B)$는 개인 i의 X재 소비량이다.)

① X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30이다.

②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를 상정하고 있다.

③ X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A와 B는 같은 양을 소비한다.

④ X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사회후생수준은 A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⑤ X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순수공공재인 경우보다 작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롤즈적 사회후생함수에서 사용재와 순수공공재의 소비 가능 조건을 구분하고, 두 사람 중 효용이 더 낮은 사람의 효용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사회후생은 $W = \min\{U_A, U_B\}$이므로 더 낮은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사용재인 경우 자원제약은 $X_A + X_B = 1000$이고, 순수공공재인 경우 비경합성 때문에 두 사람이 동일한 전체 공급량을 소비하여 $X_A = X_B = 1000$이다.

사용할 공식

사용재의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려면 두 효용을 같게 만드는 배분을 찾는다. 즉, $3\sqrt{X_A} = \sqrt{X_B}$와 $X_A + X_B = 1000$을 함께 사용한다.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이 더 낮으면 그 사람에게 재화를 옮겨 최소효용을 높일 수 있으므로 최적점에서 두 효용이 같아진다.

계산 과정

1. 사용재인 경우 $3\sqrt{X_A} = \sqrt{X_B}$를 제곱하면 $X_B = 9X_A$이다.
2. $X_A + X_B = 1000$에 대입하면 $10X_A = 1000$이므로 $X_A = 100$, $X_B = 900$이다. 따라서 $W = 3\sqrt{100} = \sqrt{900} = 30$이다.
3. 순수공공재인 경우 $X_A = X_B = 1000$이므로 $U_A = 3\sqrt{1000} = 30\sqrt{10}$, $U_B = \sqrt{1000} = 10\sqrt{10}$이다. 따라서 사회후생은 더 작은 B의 효용인 $W = 10\sqrt{10} \approx 31.62$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사용재의 최적 배분은 $X_A = 100, X_B = 900$이고 두 효용이 모두 30이므로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30이다.
② O — $W = \min\{U_A, U_B\}$는 사회 구성원 중 효용이 가장 낮은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롤즈적 사회후생함수이다.
③ O —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적으로 공동 소비되므로 A와 B는 공급량 1000단위를 각각 동일하게 소비한다.
④ X — 순수공공재일 때 $U_A = 30\sqrt{10}$, $U_B = 10\sqrt{10}$이므로 최소효용은 B의 효용이다. 틀린 표현인 ‘A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B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로 고쳐야 한다.
⑤ O — 사용재의 최대 사회후생은 30이고 순수공공재의 사회후생은 $10\sqrt{10} \approx 31.62$이므로 전자가 더 작다.

오답 포인트

순수공공재에서도 총량 1000을 A와 B 사이에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비경합성 때문에 두 사람 모두 1000을 소비하며, 롤즈적 사회후생은 효용계수가 큰 A가 아니라 실제 효용이 더 작은 B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재화의 성격에 따라 사용재는 소비량의 합을 자원제약으로 두고, 순수공공재는 각 개인의 소비량을 전체 공급량과 같게 둔다. 그다음 각 효용을 계산하여 min 안의 더 작은 값을 사회후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롤즈는 최소효용, 사용재는 나누어 소비, 순수공공재는 같은 양을 공동 소비한다.

NoteBase

문 25. 도농복합도시 A시에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각각 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시정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P = 20 - Q$이고, 농촌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P = 15 - 2Q$이다. 공공재인 소방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5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은? (단, P는 가격, Q는 서비스의 양이다.)

① 2

② 4

③ 5

④ 6

⑤ 8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비경합적인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량은 같은 서비스량에서 모든 주민의 한계지불의사를 수직으로 합한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이다.

조건 정리

도시지역 주민은 5명이고 1인당 한계지불의사는 $20 - Q$이다. 농촌지역 주민도 5명이고 1인당 한계지불의사는 $15 - 2Q$이다. 소방서비스는 공공재이므로 모든 주민이 동일한 서비스량 Q를 소비하며, 한계비용은 85이다.

사용할 공식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SMB(Q) = \sum_i MB_i(Q) = MC$
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지 않으므로 개인별 수요량을 가로로 더하지 않고, 동일한 수량에서의 한계지불의사를 세로로 더한다.

계산 과정

도시지역 전체의 한계편익은 $5(20 - Q)$, 농촌지역 전체의 한계편익은 $5(15 - 2Q)$이다. 따라서 두 지역 주민의 한계지불의사가 모두 양수인 구간에서 사회적 한계편익은
$SMB(Q) = 5(20 - Q) + 5(15 - 2Q) = 175 - 15Q$
이다. 이를 한계비용 85와 같게 놓으면
$175 - 15Q = 85$
$15Q = 90, \qquad Q = 6$
을 얻는다. $Q = 6$에서는 농촌 주민의 한계지불의사도 $15 - 2(6) = 3 > 0$이므로 위 수직합이 유효하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은 6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서비스 수준 2에서는 $SMB = 175 - 15(2) = 145$로 한계비용 85보다 크므로 서비스를 더 늘려야 한다. '2'는 틀리고, 올바른 서비스 수준은 6이다.
② X — 서비스 수준 4에서는 $SMB = 175 - 15(4) = 115$로 한계비용보다 크므로 과소공급 상태이다. '4'는 틀리고, 올바른 서비스 수준은 6이다.
③ X — 서비스 수준 5에서는 $SMB = 175 - 15(5) = 100$으로 한계비용보다 크므로 한 단위를 더 공급하는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 '5'는 틀리고, 올바른 서비스 수준은 6이다.
④ O — 서비스 수준 6에서는 $SMB = 175 - 15(6) = 85$로 한계비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⑤ X — 서비스 수준 8에서는 농촌 주민의 한계지불의사가 이미 0이므로 도시 주민의 편익만 합하면 $SMB = 5(20 - 8) = 60$이다. 이는 한계비용 85보다 작아 과다공급이다. '8'은 틀리고, 올바른 서비스 수준은 6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공공재 수요를 사적재처럼 수평으로 합하는 것이다. 소방서비스처럼 모든 주민이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하는 공공재는 각 수량에서 주민들의 가격, 즉 한계지불의사를 수직으로 합한다. 또한 역수요가 음수가 되는 구간에서는 그 주민의 한계지불의사를 0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량 문제는 동일한 Q에서 개인별 한계지불의사를 모두 더해 SMB를 만든 뒤 $SMB = MC$를 푼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수량에서 각 집단의 한계지불의사가 음수가 아닌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수요의 수직합, 효율점은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일치이다.

NoteBase

문 26.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U_A와 U_B, 사회후생을 W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많은 효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낮은 가중치를, 적은 효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가중치를 준다.

②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③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는 $W = \min\{U_A, U_B\}$로 나타낼 수 있다.

④ 사회후생함수가 $W = U_A + 2U_B$일 경우, B의 효용을 A의 효용보다 2배 더 중요시 한다.

⑤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할 때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달라야 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평등주의·공리주의·롤즈주의 사회후생함수의 형태와 효용 가중치, 그리고 공리주의적 소득분배의 극대화 조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 효용이 낮은 사람의 효용 증가에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여 효용의 평등을 중시한다.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개인들의 효용을 동일한 사회적 가중치로 합산하며, 기본형은 $W = U_A + U_B$이다.
롤즈적 사회후생함수: 가장 낮은 효용을 가진 사람의 효용으로 사회후생을 평가하며, $W = \min\{U_A, U_B\}$로 나타낸다.
가중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W = aU_A + bU_B$에서 계수 a, b는 각 개인 효용에 부여한 사회적 가중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평등주의는 효용이 높은 사람의 추가 효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효용이 낮은 사람의 추가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효용 격차의 축소를 중시한다.
② O — 공리주의의 기본형 $W = U_A + U_B$에서는 A와 B의 효용 계수가 모두 1이므로 모든 구성원의 효용에 동일한 사회적 가중치를 부여한다.
③ O — 롤즈의 최대최소 원칙은 최소 효용을 극대화하므로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_A, U_B\}$로 표현할 수 있다.
④ O — $W = U_A + 2U_B$에서 B의 효용 계수는 2이고 A의 효용 계수는 1이므로 B의 효용을 A의 효용보다 2배 중요하게 평가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달라야 한다'이다. 총소득이 고정되고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할 때 공리주의적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내부해에서는 각 개인의 소득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한계효용이 더 높은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하면 사회후생이 증가하므로, 한계효용이 다른 상태는 극대점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공리주의가 개인별 효용에 동일한 사회적 가중치를 준다는 사실과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최적 조건을 혼동하기 쉽다. ⑤의 함정은 '달라야 한다'이며, 감소하는 한계효용 아래의 공리주의적 최적 분배 조건은 한계효용의 균등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후생함수의 계수는 개인 효용의 사회적 가중치로 읽고, 공리주의적 소득분배 문제에서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소득을 조금 옮겨도 사회후생이 더 증가하지 않는 조건을 확인한다. 내부 최적점의 판단 기준은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같다는 것이다.

암기 포인트

공리주의는 효용의 합, 롤즈주의는 최소 효용, 공리주의적 최적 분배는 소득의 한계효용 균등화이다.

NoteBase

문 27.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위투표자 정리의 정치적 균형은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다.

② 일정한 조건 하에서 10억, 20억, 30억의 3개 예산안에 대한 꽁도세승자는 20억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③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선거공약이 비슷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④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⑤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중위투표자 정리가 보장하는 것은 다수결에서의 정치적 안정성이지, 자원배분의 파레토 효율성이 아니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위투표자 정리는 정책 대안이 한 차원에 놓이고 투표자들의 선호가 단봉형인 경우,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다른 대안과의 일대일 다수결에서 이기는 꽁도세(콩도르세) 승자가 된다는 정리이다. 이는 다수결 선택의 균형과 정당의 정책 수렴을 설명하지만, 그 결과가 사회 전체의 파레토 효율성을 가진다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다'이다. 중위투표자 정리는 다수결에서 어느 대안이 승리하는지를 설명할 뿐, 누구도 불리하게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더 유리하게 할 수 없는 자원배분 상태를 보장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중위투표자 정리의 정치적 균형은 다수결에서의 안정성을 의미하지만 파레토 효율성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는다'이다.

② O - 선호가 단봉형이고 세 예산안이 10억, 20억, 30억의 순서로 놓이며 중위투표자의 최선 대안이 20억인 경우, 20억 안은 10억 안 및 30억 안과 각각 대결해 과반의 지지를 얻는 꽁도세 승자가 된다.

③ O - 두 정당이 득표를 극대화하려 하면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을 중앙 쪽으로 이동시키므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공약이 비슷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④ O - 각 투표자가 하나의 가장 선호하는 정책점을 가지고 그 점에서 멀어질수록 선호가 낮아지는 단봉형 선호가 핵심 성립 조건이다. 다봉형 선호에서는 다수결 순환이 생겨 안정적인 승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O - 다수결 선거에서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가까운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과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정치적 균형'을 '경제적 효율성'과 같은 뜻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다수결에서 이길 수 있는 대안이라는 사실과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평가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위투표자 정리 문항에서는 먼저 정책 대안의 일차원성, 선호의 단봉형, 다수결이라는 조건을 확인한다. 결론은 중위 대안의 꽁도세 승리와 정당 공약의 중도 수렴이며, 파레토 효율성까지 보장한다는 표현은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중위투표자 정리: 단봉형 선호 + 다수결 → 중위 대안의 승리·정책 수렴, 파레토 효율성 보장은 아님.

NoteBase

문 28. 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편익(PMB),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S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피해(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위한 피구세의 크기는? (단, Q는 생산량이다.)

$$PMB = 600 - 4Q \qquad SMC = 6Q \qquad MD = 2Q$$

① 40
② 60
③ 80
④ 100
⑤ 12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먼저 구한 뒤, 그 생산량에서의 한계 외부피해를 피구세로 설정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식은 $PMB = 600 - 4Q$, $SMC = 6Q$, $MD = 2Q$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구해야 할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 외부피해이다.

사용할 공식

사회적 최적 생산량: $PMB = SMC$
피구세: $t = MD(Q^*)$
피구세는 생산의 외부비용을 생산자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한계 외부피해만큼 부과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사회적 최적 생산량 Q^*를 구한다.

$600 - 4Q = 6Q$

$10Q = 600$

$Q^* = 60$

2. $Q^* = 60$에서의 한계 외부피해를 구한다.

$t = MD(60) = 2 \times 60 = 120$

따라서 피구세의 크기는 120이다.

선지 판단

① X — 40은 $MD(Q^*) = 2 \times 60 = 120$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구세는 40이 아니라 120이다.

② X — 60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 Q^*이지 피구세의 크기가 아니다. 피구세는 이 생산량을 $MD = 2Q$에 대입한 120이다.

③ X — 80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 외부피해가 아니다. 올바른 피구세는 $2 \times 60 = 120$이다.

④ X — 100은 $MD(Q^*)$의 계산값과 다르다. 올바른 피구세는 100이 아니라 120이다.

⑤ O —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60이고, 이때 $MD = 2 \times 60 = 120$이므로 피구세의 크기는 120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60은 세액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다. 또한 SMC가 이미 사회적 한계비용으로 주어졌으므로 최적 생산량을 구할 때 MD를 SMC에 다시 더하면 외부피해를 중복 반영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PMB = SMC$로 Q^*를 구하고, 이어서 그 생산량을 한계 외부피해 함수에 대입하여 $t = MD(Q^*)$를 계산한다. 생산량과 세액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최적 생산량은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교점, 피구세는 그 점에서의 한계 외부피해이다.

NoteBase

문 29. 니스카넨(W. Niskanen)과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의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가격순응자이다.

② 두 모형에서 관료는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③ 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다.

④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의 공공재 생산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생산량보다 적다.

⑤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집행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점에서 생산하려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과 미그-빌레인저의 재량예산 모형을 비교하여 관료의 목표와 공공재 생산량의 크기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니스카넨: 관료는 독점적 정보력을 이용해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예산과 산출량을 확대하므로 생산량이 가장 크다.
미그-빌레인저: 관료는 산출량 자체와 재량예산에서 효용을 얻으므로 효율적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하지만, 니스카넨 모형보다는 적게 생산한다.
효율적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생산량의 일반적 순서는 '효율적 생산량 < 미그-빌레인저 생산량 < 니스카넨 생산량'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니스카넨 모형의 관료는 가격순응자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가격순응자'이며, 올바르게는 정보 우위를 지닌 독점적 예산·산출량 공급자로서 후원자에게 예산과 산출량의 묶음을 제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X — 두 모형 모두 관료를 공익만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공익의 극대화'이며, 올바르게는 니스카넨 모형에서는 예산을, 미그-빌레인저 모형에서는 산출량과 재량예산에서 얻는 관료 자신의 효용을 중시한다.
③ O — 니스카넨 모형의 생산량은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확대되고,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생산량도 산출량 선호 때문에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효율적 수준보다 크다.
④ X — 생산량의 대소관계가 반대이다. 틀린 표현은 '니스카넨 모형의 공공재 생산량은 … 더 적다'이며, 올바르게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니스카넨 모형의 생산량이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생산량보다 더 크다.
⑤ X —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점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효율적 생산량이다. 틀린 표현은 니스카넨의 관료가 그 점에서 생산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니스카넨의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여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확대한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⑤의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점'을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와 혼동하기 쉽다.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최대인 점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은 효율점이고, 니스카넨의 선택점은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은 과잉생산점이다. 또한 미그-빌레인저 모형도 효율량보다 과잉생산하지만 니스카넨 모형보다는 생산량이 작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효율점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일치, 니스카넨의 선택점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일치로 구분한다. 그다음 미그-빌레인저의 생산량이 두 수준 사이에 놓인다는 관계로 선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량 순서는 '효율점 < 미그-빌레인저 < 니스카넨'이고, 니스카넨은 예산극대화·총편익=총비용이다.

NoteBase

문 30.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적 외부성은 자원배분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실질적 외부성은 자원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③ 외부성은 생산과정은 물론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한다.

④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환경세 부과는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⑤ 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금전적 외부성과 실질적 외부성의 차이, 외부성의 발생 영역, 외부성의 내부화 수단, 이로운 외부성이 시장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금전적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가격 변화를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을 통한 이전일 뿐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일으키지 않는다.
실질적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가 시장가격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이나 생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의 차이를 만들어 시장실패를 일으킨다.
해로운 외부성이 있으면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량보다 많아지고, 이로운 외부성이 있으면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량보다 적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금전적 외부성은 다른 경제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장가격의 변화를 통해 전달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격기구가 반영하는 이전 효과이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② O. 실질적 외부성은 제3자의 효용이나 생산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적 한계비용·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편익이 달라져 비효율이 발생한다.
③ O. 외부성은 공장의 오염처럼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예방접종이나 흡연처럼 소비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④ O. 환경세는 오염에 가격을 부과하여 경제주체가 오염 비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시장유인적 방식이다. 따라서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 시장의 가격기능을 활용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이다. 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거나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작으므로,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해로운 외부성과 이로운 외부성의 생산량 효과를 뒤바꾼 선지이다. 해로운 외부성은 외부비용이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과다 생산되고, 이로운 외부성은 외부편익이 보상되지 않아 과소 생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영향이 가격 변화를 통해 전달되면 금전적 외부성, 효용이나 생산조건에 직접 전달되면 실질적 외부성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외부효과의 방향을 확인하여 해로운 외부성은 시장량이 과다하고 이로운 외부성은 시장량이 과소하다고 판단한다. 세금·보조금·배출권 거래처럼 가격과 유인을 바꾸는 정책은 시장유인적 방식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금전적 외부성은 가격을 통한 영향, 실질적 외부성은 직접 영향이다. 해로운 외부성은 과다 생산, 이로운 외부성은 과소 생산이다.

NoteBase

문 31.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③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④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⑤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그 상품의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장가격이 독점이나 물품세 때문에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때, 공공사업의 투입물이 추가 생산되는지 아니면 기존 민간 소비에서 전용되는지에 따라 평가기준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잠재가격: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있을 때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하도록 조정한 가격이다.
독점상품: 공공사업 수요만큼 생산량이 증가하면 추가 생산의 한계비용으로 평가하고, 생산량이 불변이면 밀려난 민간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나타내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물품세 부과 상품: 생산량이 증가하면 세금을 제외한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하고, 생산량이 불변이면 포기된 민간소비의 가치를 나타내는 소비자가격으로 평가한다. 물품세는 정부로 이전되는 금액이므로 그 자체는 사회적 자원비용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이다. 잠재가격은 시장가격이 불안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독점·조세·외부효과 등으로 시장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조정가격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평균비용'이다. 독점상품의 생산량이 공공사업 수요만큼 증가하였다면 추가 생산에 실제로 드는 사회적 자원비용인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③ O
독점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공공사업의 구매량만큼 민간소비가 감소한다. 이때 사회적 비용은 민간소비자가 포기한 가치이며, 이를 나타내는 시장가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생산자가격'이다.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기존 민간소비가 밀려나므로, 세금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던 소비자가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한계비용'이다.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의 생산량이 공공사업 투입량만큼 증가하면 물품세를 제외한 생산자가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세금은 사회 내부의 이전이므로 추가 생산의 사회적 자원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생산량 증가'와 '생산량 불변'을 뒤바꾸는 데 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추가 생산에 든 자원비용을 보고, 생산량이 불변이면 공공사업 때문에 포기된 민간소비의 가치를 본다. 또한 독점 왜곡에서는 한계비용과 시장가격을, 물품세 왜곡에서는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공공사업 투입으로 상품의 생산량이 늘었는지 확인한다. 생산량이 늘면 공급 측의 사회적 자원비용을 적용하여 독점상품은 한계비용, 물품세 부과 상품은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한다. 생산량이 늘지 않으면 줄어든 민간소비의 가치를 적용하여 독점상품은 시장가격, 물품세 부과 상품은 소비자가격으로 평가한다.

암기 포인트

추가 생산은 공급 측 비용, 기존 소비 전용은 소비자의 지불가격이다. 독점은 '한계비용 대 시장가격', 물품세는 '생산자가격 대 소비자가격'으로 구분한다.

NoteBase

문 32.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②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고려하지 않는다.

③ 확실대등액은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는 공공사업 평가에 활용된다.

④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 있다.

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편익은 다른 상황에서 관찰된 소비자의 행위나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공공투자의 비용·편익을 실질성, 시장거래 여부, 불확실성, 할인율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귀속되어 사회후생을 실제로 늘리는 편익이다.
무형적 편익·비용은 시장가격으로 직접 측정하기 어렵지만, 공공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화폐가치로 추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한다.
확실대등액은 불확실한 결과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으로, 위험이 있는 공공사업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산출물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얻으며 사회후생의 순증가에 기여하는 편익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비용편익 분석에 고려하지 않는다'이다. 무형적 편익과 비용도 사회적 후생에 영향을 주므로 시장에서 직접 파악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평가기법을 이용해 추정하여 분석에 고려한다.
③ O — 확실대등액은 불확실한 편익이나 비용을 그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으로 바꾸어 평가하므로, 불확실성이 있는 공공사업 평가에 활용된다.
④ O — 미래의 편익과 비용은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가치가 작아진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은 시장이자율을 사용하면 미래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더 크게 감소하여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⑤ O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서비스는 가격을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여행비용이나 관련 재산가격처럼 다른 시장에서 드러난 소비자의 행동과 시장정보를 이용해 편익을 간접 추정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는다'는 말에서 곧바로 '분석에서 제외한다'고 결론 내리게 하는 함정이다.
시장가격이 없다는 것은 측정이 어렵다는 뜻이지 사회적 편익이나 비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시장가격의 존재 여부와 분석 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사회후생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시장가격이 없어도 대체시장 정보나 비시장가치 평가기법으로 추정하여 포함하고, 불확실성은 확실대등액으로, 시점 차이는 할인율로 조정한다.

암기 포인트

무형적이라고 제외하지 않는다. 비시장 편익은 간접 추정하고, 불확실성은 확실대등액으로 조정한다.

NoteBase

문 33. 이전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전지출이란 기초연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해주는 성격의 지출을 말한다.

② 소득보조, 가격보조, 현물보조로 나눌 수 있다.

③ 소득보조는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가격보조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일으킨다.

⑤ 소득보조는 가격보조에 비하여 해당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전지출의 뜻과 소득보조·가격보조가 소비자의 예산선 및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이전지출은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대가 없이 가계나 기업에 소득 또는 구매력을 이전하는 지출이다.
소득보조는 현금을 이전하여 예산선을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므로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효과는 생기지만 대체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가격보조는 특정 상품의 실질 구매가격을 낮추어 예산선의 기울기를 바꾼다. 따라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발생하며 해당 상품의 소비를 직접 유도한다.
현물보조는 현금이 아니라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기초연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소득을 이전하는 지출은 이전지출에 해당한다.
② O — 보조 방식은 수급자에게 현금을 주는 소득보조, 특정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가격보조,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주는 현물보조로 구분할 수 있다.
③ O — 소득보조는 모든 상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늘릴 뿐 상품 사이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므로 소득효과만 발생하고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O — 가격보조는 구매력을 높이는 소득효과와 보조 대상 상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만드는 대체효과를 함께 일으킨다.
⑤ X — 틀린 표현은 '소득보조가 가격보조보다 해당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다'이다. 올바르게는 가격보조가 상대가격을 낮추어 대체효과까지 발생시키므로 해당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소득보조보다 더 크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소득보조가 수급자의 효용과 선택의 자유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상품의 소비 촉진 효과가 더 크다는 뜻으로 혼동하기 쉽다. 효용 측면에서는 소득보조가 유리할 수 있지만, 특정 상품의 소비를 늘리는 목적에는 대체효과를 일으키는 가격보조가 더 직접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산선의 기울기, 즉 상대가격이 변하는지를 먼저 본다. 기울기가 그대로이면 소득효과만 발생하고, 기울기가 변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함께 발생한다. 특정 상품의 소비 촉진 여부는 대체효과가 있는 가격보조 쪽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득보조는 평행 이동·소득효과, 가격보조는 기울기 변화·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이다.

NoteBase

문 3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역선택으로 인한 시장실패 치유
ㄴ. 정부조세수입 확충
ㄷ. 온정적 간섭
ㄹ. 소득재분배 수단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급여 구조가 어떤 재정학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ㄱ. 역선택 치유: 자발적 연금시장에서는 위험이 높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강제가입은 위험이 다른 사람을 함께 가입시켜 이러한 역선택 문제를 완화한다.
ㄴ. 정부조세수입 확충: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재원이며, 일반적인 정부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이 제도의 목적은 아니다.
ㄷ. 온정적 간섭: 정부가 개인의 근시안적 판단이나 노후 준비 부족을 보완하려고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강제하는 성격이다.
ㄹ.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급여의 구조를 통해 가입자 간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옳은 항목은 ㄱ, ㄷ, 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 ㄴ’에서 ㄴ이 틀리고 ㄷ과 ㄹ이 빠져 있다. 국민연금은 일반 조세수입 확충 수단이 아니라 역선택 완화, 온정적 간섭, 소득재분배의 성격을 가지므로 ‘ㄱ,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ㄱ, ㄴ, ㄷ’에서 ㄴ이 틀리고 ㄹ이 빠져 있다. 정부조세수입 확충이 아니라 소득재분배가 포함되므로 ‘ㄱ,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③ O — ㄱ은 강제가입을 통한 역선택 완화, ㄷ은 노후 준비를 유도하는 온정적 간섭, ㄹ은 보험료·급여 구조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해당한다.
④ X — ‘ㄴ, ㄷ, ㄹ’에서 ㄴ이 틀리고 ㄱ이 빠져 있다. 국민연금은 조세수입 확충 수단이 아니며 역선택을 완화하므로 ‘ㄱ,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ㄱ, ㄴ, ㄷ, ㄹ’에는 틀린 ㄴ이 포함되어 있다. ㄴ을 제외한 ‘ㄱ, ㄷ, ㄹ’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보험료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걷는다는 이유로 ㄴ의 ‘정부조세수입 확충’을 제도의 성격으로 오인하기 쉽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금급여를 위한 사회보험 재원이며, 국민연금의 핵심 재정학적 근거는 시장실패 완화, 온정적 간섭, 소득재분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적연금의 강제가입 이유를 묻는 경우에는 ‘민간보험시장의 역선택 완화’, ‘개인의 노후 준비 부족 교정’, ‘소득재분배’를 확인한다. 정부가 돈을 걷는다는 외형만으로 일반 조세수입 확충 목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국민연금은 역선택 완화·온정적 간섭·소득재분배이며, 조세수입 확충은 아니다.

NoteBase

문 35. 우리나라 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② 공공부조는 기여한 국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는 조세를 이용한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이다.

④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부조·사회보험·조세·근로장려세제가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과 각 제도의 수급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산·소득 조사 등을 거쳐 급여를 제공하는 비기여 방식의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자 등의 기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세를 통한 재분배는 일반적으로 부담 능력이 클수록 더 큰 비율로 부담하는 누진적 소득과세에서 뚜렷하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한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기여한 국민만'이다. 공공부조는 사전 기여를 수급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올바르게는 소득·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활 곤란자에게 조세 재원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부가가치세는 조세를 이용한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로 소득 대비 부담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올바르게는 누진적인 소득세가 조세를 통한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수단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기여를 바탕으로 가입 자격과 사회적 위험의 발생 등 급여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기여 여부와 무관한 선별 지원은 공공부조의 특징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근로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와 ④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기여 원리를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③은 부가가치세가 복지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과 부가가치세 자체의 재분배 효과를 혼동하게 한다. ⑤의 함정은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장려'라는 명칭을 '모든 근로자 지원'으로 과도하게 확대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전 기여가 필요한지를 본다. 비기여·선별 지원이면 공공부조, 기여·보험 원리이면 사회보험이다. 조세는 누진적인지 역진적 부담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별하고, 장려금은 소득·재산·가구 요건이 붙는 선별 제도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부조는 비기여·선별, 사회보험은 기여·위험 대비, 누진소득세는 재분배,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이다.

NoteBase

문 36.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코즈정리는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외부성의 문제가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② 조세 부과를 통해 내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③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 만큼의 크기를 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세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크기는 단기적으로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하다.

⑤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을 활용하여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코즈식 협상, 피구세, 보조금, 배출권거래제도의 작동 원리와 조세·보조금의 장단기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부성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가격을 거치지 않고 제3자의 편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외부성을 내부화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그 외부편익이나 외부비용까지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코즈식 협상은 재산권이 분명하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충분히 작을 때 당사자 간 협상으로 효율적 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성의 한계피해를 사적 비용에 반영하며,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의 총량을 정한 뒤 거래를 허용하여 감축이 낮은 비용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코즈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충분히 작은 경우, 당사자들이 협상하여 정부의 직접 규제 없이도 외부성을 내부화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② O.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하는 활동에 한계외부비용만큼 조세를 부과하면 사적 한계비용에 외부비용이 반영되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으로 생산·소비가 조정될 수 있다.
③ O.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액과 같은 크기의 피구세를 부과한다. 생산량과 소비량이 일치하는 통상적인 단일시장 모형에서는 선지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 수준'도 같은 수량을 가리킨다.
④ X. '단기적으로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하다'가 틀린 표현이다. 동일한 한계유인을 주는 조세와 생산 감축 보조금은 단기에는 생산량 감소 효과가 동일하지만, 장기에는 보조금이 기업의 이윤과 신규 진입을 늘릴 수 있어 산업 전체의 생산량 감소 효과가 조세보다 작아진다. 올바르게는 '보조금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단기에는 조세와 동일하지만 장기에는 조세보다 작다'이다.
⑤ O. 배출권거래제도는 총배출량을 제한하면서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기업은 배출권 가격과 자체 감축비용을 비교하므로 시장기구를 이용해 외부성을 내부화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단기와 장기의 순서를 뒤바꾼 데 있다. 단기에는 기업 수가 고정되어 동일한 한계유인을 주는 조세와 감축 보조금의 생산 감소 효과가 같지만, 장기에는 보조금이 진입을 유도하므로 조세와 같은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성 정책은 먼저 기업의 한계의사결정에 주는 효과와 기업의 진입·퇴출에 주는 효과를 나누어 판단한다. 조세와 감축 보조금은 단기의 한계유인은 같을 수 있지만, 보조금은 이윤을 높여 장기 진입을 유도한다는 차이가 있다.

암기 포인트

조세와 감축 보조금은 단기 효과는 같고, 장기에는 보조금의 진입 유인 때문에 감축 효과가 더 작다.

NoteBase

문 37. 사회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두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5분위배율의 값은 1이다.

② 가치판단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분배 상태라면 앳킨슨지수의 값은 동일하다.

③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④ 앳킨슨지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⑤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한다면 로렌츠곡선만으로는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5분위배율, 지니계수, 앳킨슨지수, 로렌츠곡선의 의미와 불평등 판단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지수이다.
앳킨슨지수는 사회가 불평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는 불평등회피도와 소득분배를 함께 반영하는 규범적 지수이다.
로렌츠곡선은 누적 인구비율과 누적 소득점유율의 관계를 나타내며, 한 곡선이 다른 곡선보다 항상 위에 있을 때 로렌츠 우위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같으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이 모두 20%이므로 5분위배율은 1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가치판단이 달라도 앳킨슨지수의 값은 동일하다'이다. 앳킨슨지수는 불평등회피도라는 가치판단을 반영하므로 동일한 소득분배 상태라도 불평등회피도가 다르면 지수 값이 달라질 수 있다.
③ O —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완전평등을 뜻하므로 0에 가까울수록 더 평등한 분배이다.
④ O — 앳킨슨지수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불평등으로 인한 후생손실이 없는 완전평등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0에 가까울수록 더 평등하다.
⑤ O — 두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어느 한 사회가 모든 누적 인구구간에서 일관되게 우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로렌츠곡선만으로 두 사회의 불평등 정도에 단일한 순위를 매길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②는 앳킨슨지수를 지니계수처럼 소득분배만으로 값이 정해지는 지수로 오인하게 한다. 앳킨슨지수에는 불평등회피도라는 사회적 가치판단이 들어가므로 같은 분배라도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지수가 가치판단을 포함하는지를 먼저 구분한다. 앳킨슨지수는 불평등회피도에 따라 값이 달라지고, 로렌츠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아 한 곡선이 일관되게 위에 있을 때만 불평등 순위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완전평등이면 5분위배율은 1,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는 0이다. 앳킨슨지수에는 불평등회피도가 들어가며,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우열을 확정할 수 없다.

NoteBase

문 38.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② 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하에서도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③ 에지워스(F. Edgeworth)는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분배라고 하였다.

④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도 정당화된다.

⑤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더욱 중시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최적 분배에 관한 롤즈, 러너, 에지워스, 공리주의, 노직의 대표 주장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롤즈: 최소극대화 원칙 — 가장 불리한 사람의 몫을 가능한 한 크게 하는 분배를 중시한다.
러너: 동등확률과 한계효용 체감 — 누가 어떤 효용함수를 갖는지 알 수 없고 그 결합을 동등한 확률로 본다면,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균등분배가 기대후생을 극대화한다.
에지워스: 공리주의적 균등분배 — 사회후생을 개인 효용의 합으로 보고, 효용함수의 동일성과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 등 필요한 가정이 충족되면 완전한 균등분배가 바람직하다.
공리주의: 총효용 극대화 — 분배의 평등 자체보다 사회 전체 효용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노직: 권리보유이론 — 최종 분배의 모양보다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중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롤즈의 차등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설명은 최소극대화 관점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다'이다. 러너는 각 사람이 서로 다른 효용함수와 결합될 가능성을 동등하게 보고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면,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균등분배가 기대후생을 극대화한다고 보았다.
③ O — 에지워스의 공리주의적 분배론에서는 사회후생을 개인 효용의 합으로 보고 효용함수의 동일성 및 한계효용 체감 등의 가정이 충족되면, 소득을 완전히 균등하게 배분할 때 총효용이 극대화된다.
④ O — 공리주의는 분배 결과의 평등도 자체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효용의 총합을 극대화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총체적 후생이 더 커진다면 불균등한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
⑤ O — 노직은 정당한 취득과 정당한 이전을 거친 보유라면 그 결과가 불균등해도 정의로울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결과의 일정한 분배 형태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는 '효용함수가 다르면 균등분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공리주의의 난점을 러너의 결론처럼 바꾸어 놓았다. 러너의 핵심은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효용함수와 개인의 결합을 동등확률로 보는 불확실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명을 대표 기준과 연결한다. 롤즈는 최소수혜자, 러너는 동등확률 아래 균등분배, 에지워스는 가정하의 총효용 극대화와 균등분배, 공리주의는 효용의 합, 노직은 취득·이전 절차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롤즈는 최약자, 러너는 동등확률, 에지워스는 가정하의 균등, 공리주의는 총효용, 노직은 정당한 절차이다.

NoteBase

문 39. 분배에 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 간 효용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실천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③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④ 사회전체 후생의 증감에 입각한 공리의 원칙이 유일한 도덕기준이다.

⑤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리주의적 분배론이 사회후생을 판단하는 기준과 소득의 한계효용에 관해 어떤 가정을 두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리주의적 분배론은 개인들의 효용을 합한 사회 전체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분배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개인별 효용을 하나의 총효용으로 합산하려면 개인 간 효용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균등하게 분배할수록 총효용이 커진다는 결론은 소득이 늘수록 추가 소득에서 얻는 효용이 작아지는 한계효용 체감에 근거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개인들의 효용을 합산하여 사회후생을 평가하므로 개인 간 효용 비교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② O — 총효용 극대화를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총효용을 늘리는 과정에서 일부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희생될 수 있다. 이는 공리주의에 대한 대표적 비판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소득의 한계효용이 불변'이다. 한계효용이 불변이면 소득을 누구에게 이전하더라도 총효용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평등분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평등분배의 결론을 도출하려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고 가정한다.
④ O —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 후생의 증감을 판단하는 효용의 원리를 도덕적 판단의 궁극적 기준으로 삼는다.
⑤ O — 공리주의에서 바람직한 분배는 개인 효용의 합인 사회 전체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불변'과 '체감'을 혼동하기 쉽다. 한계효용 체감이 있어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적은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할 때 잃는 효용보다 얻는 효용이 커져 총효용이 증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리주의적 분배 문항에서는 '개인 효용의 합산·총효용 극대화·개인 간 효용 비교'를 먼저 확인한다. 평등분배의 근거를 물으면 소득의 한계효용은 불변이 아니라 체감이라는 점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공리주의는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고, 평등분배의 근거는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이다.

NoteBase

문 40. 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후소득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② 완전적립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 부과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가 발생한다.

③ 상속효과로 민간저축이 증가한다.

④ 재산대체효과로 민간저축이 감소한다.

⑤ 사적 보험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역선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연금제도의 사회보험적 성격,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재분배 방향,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운용하여 같은 세대의 노후급여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재원 이전은 주로 세대 내에서 나타난다. 부과방식은 현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 은퇴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므로 세대 간 재분배가 나타난다.
재산대체효과는 공적연금 급여가 노후자산을 대신하여 민간저축을 줄이는 효과이고, 상속효과는 연금으로 생긴 세대 간 이전을 상속으로 보완하려는 동기 때문에 민간저축을 늘리는 효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연금은 노령으로 근로소득이 줄거나 사라질 위험에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완전적립방식에 '세대 간 재분배', 부과방식에 '세대 내 재분배'를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완전적립방식은 주로 세대 내 재분배, 부과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와 관련된다.
③ O. 상속효과가 나타나면 부모 세대는 연금제도로 인한 세대 간 이전을 자녀에 대한 상속으로 보완하려 하므로 상속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저축이 증가한다.
④ O. 재산대체효과가 나타나면 장래에 받을 공적연금이 개인의 노후자산을 대신하므로 스스로 축적할 필요가 있는 민간저축이 감소한다.
⑤ O. 사적 보험은 위험이 큰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으로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공적연금은 의무가입을 바탕으로 사회보험으로 운영하여 이러한 역선택을 완화하거나 방지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두 재정방식의 재분배 방향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공적연금은 재산대체효과로 저축을 줄일 수도 있지만 상속효과로 저축을 늘릴 수도 있으므로 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한 방향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료를 낸 세대와 급여를 받는 세대가 같은지를 먼저 본다. 같은 세대의 적립금으로 급여를 충당하면 완전적립방식, 현 근로세대가 현 은퇴세대의 급여를 부담하면 부과방식이다. 저축효과는 공적연금이 개인 자산을 대신하면 감소, 상속을 보완하려는 동기를 만들면 증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적립은 세대 내, 부과는 세대 간이다. 재산대체효과는 저축 감소, 상속효과는 저축 증가이다.

NoteBase